

1. 모두발언

- 지금부터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.
- 우리 경제는 코로나19 기간 급증한 채무를
연착륙시키는 과정에서,
 - 고금리로 이자 상환 부담이 늘고
제2금융권 등의 신용위험 관리 강화로 신용대출이 감소하면서
서민층의 자금 애로가 커졌습니다.
- 이에 현 정부는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,
채무조정 활성화를 위한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,
취약계층 자립을 위한 금융·고용·복지 연계 시스템 구축 등
다각적인 서민금융 지원을 추진해 왔습니다.
 - 특히, 소상공인을 위해서는
새출발기금 신설을 통해 40조원 규모 채무조정 추진,
43만명 대상 만기연장과 상환유예,
2조원 규모 이자 환급 등 과감한 지원을 해왔습니다.
-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
서민층의 자금 사정이 여전히 어려운 점을 감안해
추가적인 「서민금융지원 강화 방안」을 마련했습니다.
- 우선, 정책서민금융을 당초 계획보다 1조원 확대해
역대 최대 규모인 12조원¹⁾ 수준 공급하겠습니다.

1) 햇살론유스(1천억원→2천억원), 불법사금융 예방 대출(1천억원→2천억원), 사업자 햇살론(1.5천억원→3천억원), 새희망홀씨(4.1조원→4.2조원) 등 '24년 공급 수준(9.3조원) 대비 약 27% 수준 확대된 규모

- 특히, 저신용층, 영세 소상공인, 미취업 청년 등에 대한 대출 공급을 대폭 늘리고, 대출한도·금리 등 지원조건도 개선하겠습니다.
- 민간 금융회사의 서민금융 지원 대출도 작년보다 3.8조원 확대되도록 인센티브 부여 등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.
- 적극적인 채무조정으로 취약차주의 재기를 지원하겠습니다.
 - 올해 말까지 한시 운영 중인 채무조정 특례²⁾를 상시화해 연체우려 단계에서부터 선제적인 채무조정을 시행하겠습니다.
 - 노령층, 자영업자, 청년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원리금 감면 폭을 최대 20%p까지 추가 확대해 상환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.
- 정부는 오늘 발표한 4.8조원 규모 금융지원 대책의 이행 상황과 서민층의 수요를 면밀히 점검하고, 필요시 추가적인 지원 대책을 검토하겠습니다.
 - 아울러, 불법사금융·보이스피싱 등 민생금융범죄 근절 대책도 3월 초 발표하겠습니다.
- 지금부터는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.

2) 30일 이하 연체자 30~50% 금리인하(신속채무조정특례), 31~89일 연체한 취약계층에 원금 최대 30% 감면(사전채무조정특례)